

광주 지자체들 청년정책 연령 기준 '제각각'

정부, 청년기본법 만 19~34세로 규정 사업·조례안 따라 18~29·19~45 다양 구에선 청년·시에선 중년... 혼선 가중

광주시가 올해 청년 관련 정책으로 1.71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각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도 단위 시·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지만, 지역의 경우 지역·정책별로 규정된 청년의 범위가 달라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각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에서는 청년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청년을 15세~2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구를 제외한 광주시와 각 자치구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39세로 보고 있다. 심지어 남구는 만 19세~45세까지가 청년이다. 이 때문에 각 정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청년 교통수당 드림', '청년13(일+삶)통장' 등 적극·현금성 지원정책은 대부분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광주청년 창업펀드' 등 창업·일자리·주거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만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도 허다하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은 만 39세까지이며, '청년 주거지원'은 만 30세까지만 해당되는 등 세

부적인 정책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청년의 범위와 각종 정책 참여 대상자의 연령 기준이 자치구와 중앙부처 사업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된 탓에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38)는 "그동안 지원받았던 청년사업들이 대부분 만 39세 까지만 광주시에 문의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 답변을 받았다"면서 "각 사업별로 참여 연령이 다르니 혼란스럽고 기대가 무너져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청년 일자리 등 큰 이슈로 떠오르는 MZ 세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직업·주택 등의 이유로 광주시를 떠나는 10여만 명의 청년을 붙잡기 위해선 청년정책의 기준 연령을 일관성있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MZ 세대가 불리는 청년세대는 연령 범위가 넓고 같은 청년이라도 개인의 소득, 직업 등 차이가 다른 세대에 비해 크다"면서 "결혼·실업·주거 등의 문제를 겪는 연령대 또한 달라 정책 대상 나이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령별 고충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청년의 범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승현 기자



광주·전남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69명을 기록하며 일일 최대 기록을 경신한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온풍기를 켜고 있다. /김생훈 기자

광주·전남 확진자 사흘 연속 200명대

요양병원·초등학교 감염 지속

광주·전남이 전날 일일 최대 코로나19 확진자수를 경신한 가운데 이날도 여전히 100명대를 가뿐히 넘기면서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11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105명(9091~9195번), 전남 64명(6875~6938번) 등 총 16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 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1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환자가 91명으로

늘었고, 광산구 모 초등학교에서도 5명이 추가돼 누적 27명을 기록 중이다. 동구 모 정신병원에서는 이날 확진된 3명을 포함해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모두 38명이 무더기 확진돼 병원 건물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이날 남구 모 초등학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등 요양병원과 시설, 복지시설, 교육기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추가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에서는 14개 시·군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김용환·오선우 기자

▲목포 22명 ▲나주 16명 ▲영암 5명 ▲여수 4명 ▲장성 3명 ▲순천·담양·해남·영광·진도 2명 ▲광양·화순·완도·신안 1명 등이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이날 4명이 추가 확진돼 하루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매우 강한 반면 잠복기는 불과 평균 사흘 정도로 짧은 만큼 증상이 있거나 취약시설이나 수도권 등을 방문한 사람은 서둘러 선별검사소를 방문, 진단검사를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김용환·오선우 기자

조선대 교원채용 '절차상 하자' 논란

20분 강의·10분 질의응답서 1인당 30분 실기강의로 변경 학교 측 "인사팀과 협의했다"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가 교원 선발공고와 다르게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총장 명의로 공연예술무용과 한국무용 강의 전담 교원(계약직 2년)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라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는 1차 서류전형, 2차 공개강의, 3차 면접을 진행해 최종 1명을 선발했다. 공연예술무용과는 1차 서류 전형에 합

격한 3명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개 강의에서 '미리 공지 주제로 20분 내외의 강의와 10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실시한다'는 공고와 다르게 질의응답 시간 없이 1인당 30분간 실기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채용공고와 다르게 진행돼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개채용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A씨는 "실기강의를 하면 반드시 질의응답이 이어져야 객관적 평가 이뤄질 수 있는데 학교 측이 2차 공개강의 시작 5분 전에 공고문과 다르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무용 강의 전담 교원을 채용하는데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현대무용

전공자였다"며 "통상적으로 한국무용 전공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현대무용 전공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고, 이날 중 법원에 교원 임용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연예술무용학과 관계자는 "이른 전담 교원이 아닌 실기 전담 교원을 선발해야 하기에 교원인사팀과 협의해 질의응답 시간 없이 실기강의만 했다"며 "학교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5명 중 2명은 조선대 교수가 맡기로 돼 있는데 교수 중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교수가 없어 현대무용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재개발 비리 엄단·투명한 사업 추진 동구, 민관 합동 '기획점검반' 운영

광주 동구가 재개발 비리를 엄단하고 투명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개발 기획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학동4구역 철거 붕괴 사고 이후 재개발사업 용역계약 및 분양권 비리 등 부조리 적결에 따른 대책 마련과 재개발조합 운영실태 및 공사현장 점검 등 안전한 재개발사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동구만의 자체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재개발 기획점검반은 전담 공무원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 환경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포함 10명으로 꾸러졌다.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된 각종 용역계약 사안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조합운영 점검 내실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구만의 특화된 점검체계를 구축해 '원스톱 합동점검'으로 재개발 비리를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동구 관내

재개발 현장 8곳에 대해 수시 점검계획을 세우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이번 점검반은 조합설립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 등 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맞춤형 행정지원과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재개발사업 추진과 책임 있는 재개발조합 운영에 있어 적극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정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점검방식과 차별화된 재개발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경매 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원룸매매(신축)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수익 750만 년수익 9000만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p>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p> <p>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p> <p>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p> <p>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p>		<p>010-6670-9800</p>	<p>010-6670-9800</p>
<p>전남</p> <p>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p> <p>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p> <p>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p> <p>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p> <p>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p>		<p>010-6670-9800</p>	<p>010-6670-9800</p>
<p>시외</p> <p>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p> <p>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p>		<p>010-6670-9800</p>	<p>010-6670-9800</p>